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촉구 결의안(대안)

의안 번호	11062
----------	-------

제안연월일 : 2011. 3. 9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이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였으나, 현재까지도 한국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 그리고 침략전쟁 과정에서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모든 반평화·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현 시점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해 빚어졌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는 점에 깊이 유의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사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그 해결에 일본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 전 국민과 더불어 인식을 같이 하고,

아울러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무효임을 천명하고,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와 불법적인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인한 피해, BC급 조선인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 관련 피해자 등 한·일간 미해결 과거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문제가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로 불법편입하면서 발생한 역사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조치와 계획을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 각료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반평화적인 행위를 중단

하고, 강제 합사된 한국인(조선인)의 명부를 영세부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피해자의 영혼을 해방하고 그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등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그 피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과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사회 내 재일한국인·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그간의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본 정부가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이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등을 통해 공통의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국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이 자유·평등·정의·인권·박애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6자회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증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9.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의 균형된 이익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과, 양국 간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한·일 국민 상호 간의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10.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국제적 금융경제위기 대응, 공적개발원조, 환경과피 및 기후변화대응, 비확산, 대테러협력, 에너지·자원 협력,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제안경위

가. 2010년 4월 5일 강창일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촉구 결의안”이 2010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11.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나. 2010년 6월 21일 송민순의원 등 70인이 발의한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넘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 결의안”이 2010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6.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7)에서 위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 2건의 결의안을 조정·통합하여 한일 양국 간 과거사 정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 촉구의 내용을 포괄하는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3.9)에서 위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2010년이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주권 침탈과 식민 지배, 그리고 침략전쟁 과정에서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모든 반평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해결에 일본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2010년 6월 27일 한·일 정상회담시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한바 있고, 2010년 8월 10일에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결의안을 제출함.